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7643.15	코스닥	1179.29
	(-179.09)		(-28.05)
금리	3.650	환율	1489.95
	(+0.052)		(+17.55)

비주류 털고
식품·SPA 집중
이랜드, 적자탈출 승부수
04



산업전반 노조 리스크 韓 공급망 위기 번진다

협력사·하청업체도 가세

삼성전자 총과업 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2026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협상테이블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조합의 쟁의 범위가 확대된 데다 성과급 요구가 업종불문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협력사·하청업체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 마지막 사후조정회의(2차)를 진행했다. 총과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의 담판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호제 절충형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사간에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상호합의가 결렬될 경우 총과업은 한층 더 현실화한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 파업시 협력사까지 파장 평택 생산라인 하나에 3만명 연계 포스코도 58년만에 첫 파업 위기 정규직·하청노조 반발 이중구조 현대차·카카오, 노사 갈등 시사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담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45조 원 규모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 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 파업이 본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캠캐스 생산라인 하나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들은 이미 장비반입 시점을 앞당기고 핵심 부품 재고 확보에 나서는 비상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일정이 틀어지면 후속 공정까지 연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와 클린룸 공정 운영 담당자가 외주·협력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체력이 약한 중소협력사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전날 “삼성전자에서 운영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스코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정규직과 하청 노조가 동시에 반발하는 이중 갈등 구조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11일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는 임금·복지 체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고 직고용 당사자인 하청 노조도 “회사의 직고용 발표는 불법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전면 파업 없이 생산 체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무분규 사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총과업을 마쳤으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조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무기한 이어가고 있고 사측은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6명을 형사고소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2차 파업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를 2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췄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플랫폼 업계도 가세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는 20일 단체 행동을 예고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는 대기업 노사 갈등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 리스크로 확산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시발점으로는 SK하이닉스가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합의하자 삼성전자(15%), 현대차(순이익 30%), 카카오(13~15%) 등으로 노조의 요구수준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는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조합의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성과급 등 보상 체계까지 교섭 테이블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상 체계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성과급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美 국방장관 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국방부

“긴축 함정에 빠지면 안돼... 소비가 미덕”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긴축, 민생 고통 수수방관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의 겸 제8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 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

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럴 때(돈이 돌고 있지 않을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개방 더는 연기 안돼”

대한건설협, 탄원서 70만장 제출

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다가온 종합·전문 시장 간의 업역 폐지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문 건설업계가 보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간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종합 건설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된 바 있다. 당

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을 만들어 보호를 받았다. 현재는 4억 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다. 올해 말로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협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체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에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갈등을 키웠다.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

달리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체 일감 자체가 줄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더딘 상황이다.

장흥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실종 초등생 사망에 “앞으로는 이런 사고 나지 않게 더 신경써야”
-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조현 장관에게 ‘나무호 피격’ 보고받은 뒤 “수고하셨다”

- ▲이 대통령 “석유최고가격제 안했다면 2500~2600원 갔을 것”
-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자도 매도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



- ▲14일부터 6·3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 ▲‘영업비밀침해 신고 최대 2억원 포상’ 국무회의 의결

/사진 뉴스